

평동산단 외국인단지 임대료 폭탄

정부, 2년 연속 20% 이상씩 일방 인상 보증금도 최대 10배↑...입주기업들 반발

정부가 광주 평동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임대료를 2년 연속 20% 이상씩 인상한 데 이어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배 이상 올리면서 입주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평동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7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배 이상 인상했다.

이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했던 일반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평동은 ㎡당 93원)를, 일반산단 입주기업에 적용하는 현실임대료(공시지가의 5% 수준, 평동은 ㎡당 706원)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10년마다)한 10개 입주기업은 최소 2.8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임대보증금이 폭등했다.

2002년 4월 4만4868㎡를 임대해 평동의 투자지역에 입주한 H사의 경우 지난해 4월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이 기존 2158만원에서 2억 1664만원으로 1000% 인상됐다. 2만 1817㎡를 임대한 E사도 입주 당시 1649만원이었던 임대보증금이 지난해 7월 재계약하면서 590% 인상된 9741만원으로 뛰었다.

이같이 대폭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나머지 입주업체 50여개 사에도 임대계약 갱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임대료마저 해마다 20% 이상씩 인상돼 입주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K사의 경우 2010년 연 2495만원이었던 임대료가 2011년 3049만원, 올해 3683만원으로, 2년 사이에

■ 광주평동외투자지역 임대보증금 인상 내역 (단위: 원, %)

구분	면적(㎡)	최초임대보증금	갱신계약보증금	인상률
A사	11570.20	8,747,070	52,900,628	600
B사	6611.80	4,998,521	32,372,852	650
C사	6611.70	4,998,444	32,372,438	650
D사	6611.70	4,998,444	32,372,438	650
E사	21817.50	16,494,030	97,418,930	590
F사	6611.70	4,998,444	33,007,161	660
G사	10908.40	23,519,546	66,480,778	280
H사	44868.10	21,582,363	216,643,635	1000
I사	6611.70	4,998,444	33,007,161	660
J사	6611.70	4,998,444	33,007,161	660

*2001~2002년 입주해 2011년 7월 지침 개정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한 기업들

47%나 급등했다.

문제는 정부가 입주기업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데다, 앞으로 2~3년간 지속적으로 20%씩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데 있다.

입주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기업 L사 대표는 "임대아파트에 살아도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은 사전에 세입자와 협의하는데 평동의 투자지역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

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업자만 도 못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평동의 투자지역경영자협의회도 지경부와 광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진정서를 내고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최근 평동외투자지역 임대료는 매년 20% 이상 상승하고, 임대보증금도 작년 대비 800%가 넘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며 "급작스런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은 지역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악한 광주지역의 경제상황과 평동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의 영세성, 허술한 단지 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천안·구미 등 다른 외투자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동외투자지역의 임대료를 앞으로 66%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관계자는 "임대료의 경우 다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비해 평동이 저렴하고, 임대보증금도 10년전 금액으로 현실성이 없어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금융자산 10억 이상 4149명

매년 꾸준한 증가...전국 14만 2000명의 2.9%

광주·전남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414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국의 부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역 부자 수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9위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으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부자는 2329명, 전남지역 부자는 1820명이었다. 전국적으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14만2000명으로, 광주·전남지역 부자는 전체의 2.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8100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만65000명, 부산 1만1700명, 대구 6100명이었다. 이어 경남이 4600명, 인천 4000명, 경북 2800명, 대전 2700명, 전북 2300명 순이었다. 충남이 2200명, 충북과 울산이 각각 1900명, 강원 1700명, 제주 13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지역 부자의 경우 지난해 2009년 2881명에서 2010년엔 3739명, 지난해엔 414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전국 대비 비중 역시 2009년 2.68%에서 2010년 2.

86%, 2011년 2.92%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 부자들의 평균 총자산은 14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부동산이 58.0%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35.2%, 기타자산(예술품, 회원권 등)이 6.8%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있지만 부자들의 30%는 유망한 투자 대상 1순위로 부동산을 꼽았다.

조사대상 부자들 가운데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68%에 그쳤다. 10명 중 7명 가량(68.7%)은 '최소 100억원 이상 자산을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500억원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8%를 넘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국회의장에 강창희 의원 선출 19대국회 지각 개원

19대 국회가 2일 오전 강창희(새진) 국회의장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한 데 이어 오후에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원식은 국회의원 선선와 강창희 신임 의장의 개원사, 이명박 대통령의 축하 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4면>

강 의장은 개원사에서 "우리는 지난해 4·11 총선 선거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싸우지 마라' '부정부패하지 마라'라는 등 많은 질타를 받았다"며 "특권을 없고 헌신과 고뇌만 있는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정부와 국회는 (유럽 재정 위기 등)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당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라



를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9대 첫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새 국회의장단을 선출했다.

7선으로 19대 국회 최다선인 정몽준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된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6선)은 재석의원 283명 중 195표를 얻어 신임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강 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 현행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의장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민주통합당 박병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여야는 오는 5일을 소집일로 하는 309회 국회(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한 달간의 임시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9일까지 삼임위원회 배분이 마무리된다. 또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국정조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MBC 등 언론사 파업 사태와 관련한 국회 삼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 주요 쟁점이 쟁여 있어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던 광주 평동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최근 임대료 폭등과 각종 규제에 성장의 발목을 잡혀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평동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지역 전경. /최현배기자 choi@

'수돗물 오염 사태' 원인 규명 실패

경찰 한달 수사 책임소재 못 밝히고 사실상 내사 종결

지난 5월 광주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산성 수돗물 오염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인 규명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구 용연정수사업소 직원과 공사인부 등을 대상으로 한 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오염물질이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과다투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내사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도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징계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광주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했던 이번 사태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광주동부경찰은 "응집제(PAC) 과다 투입으로 산성 수돗물 공급의 원인이 된 약품트레인 밸브를 누가 건드렸는지를 조사했지만 책임소재

를 밝혀내지 못해 광주지방경찰청과 이번 사건을 계속할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동구 용연정수사업소 소속 공무원 2명과 공사 근로자 4명을 2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밸브 동작 부분에 대해 공무원들은 인부들이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인부들은 밸브를 건드리지도 않았고 공무원들이 주의하라고 주지하지도 않았다고 서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질신문까지 했으나 모두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어느 쪽이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수사를 계속해야할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 역시 경찰 조사 후 관련 공무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수돗물 사태와 관련 광주 전 지역에서 43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돼 심의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찰이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직원 징계 등 이후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5월 12일 용연정수사업소 내 약품트레인 밸브 오작동으로 산성 성분의 응집제가 10배 이상 초과 투입되면서 산성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고 광주전 지역의 물고기 사육을 당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판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43-1 / Tel. 062)226-0001

Mercedes-Benz

국립발레단, 광주 최초 공연!
'백조의 호수'
7.6~7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220-0541 |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